

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(1)호 약관(구 외환은행) 개정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(1)호 약관(구외환은행)</p> <p>제4조(거래장소) 거래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"개설점"이라 함) 이외의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·현금자동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"전산통신기기"라 함)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 방법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25조(조세 및 비용) ①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.</p> <p>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신탁재산 운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, 차입금의 이자, 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, 신탁의 외부감사비용, 기타 이</p>	<p>신개인연금신탁 채권형 제(1)호 약관</p> <p>제4조(거래장소) 거래처는 신탁계좌를 개설한 영업점(이하 "개설점"이라 함) 이외의 <u>은행이 사전에 안내한</u>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·현금자동입출금기·컴퓨터·전화기 등(이하 "전산통신기기"라 함)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 장소 또는 거래 방법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25조(조세 및 비용) ① <u>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한</u>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및 기타 신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<u>사용합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<u>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</u> 신탁재산에 속하는 <u>금융투자상품의 매매수수료, 차입금의 이자, 신탁재산</u></p>	<p>약관명칭변경</p> <p>문구 추가</p> <p>문구추가</p> <p>문구수정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예 준하는 비용 등으로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.</p> <p>제26조(수수료)</p> <p>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생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</p>	<p>예 관한 소송비용, 신탁의 외부감사비용,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을 말합니다.</p> <p>제26조(수수료)</p> <p>①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<u>사전에 안내한</u>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증서재발행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가 원하거나 <u>거래처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</u>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	
<p>제33조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 ① 거래처는 증서·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멸실 · 훼손했을 때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이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	<p>제33조(사고·변경사항의 신고) ① 거래처는 증서·거래인감 등을 분실·도난·멸실 · 훼손했을 때는 <u>지체 없이</u> 신고하여야 합니다.</p>	문구추가 문구수정 문구추가 및 단서삭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38조(통지방법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거래처가 제3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	<p>② (좌 동)</p> <p>③ <삭 제></p> <p>제38조(통지방법)</p> <p>① (좌 동)</p> <p>② 은행이 제1항의 통지를 서면으로 했을 때는 <u>은행의 책임있는 사유없이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은행에 대한 통지등이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</u>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</p> <p>③ 은행이 신탁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, 관계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거래처가 제33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 후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.</p>	<p>항 삭제</p> <p>인용조항 수정</p> <p>도달주의 문구정비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제39조(신탁금의 시효) 신탁금에 대한 수익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제40조(약관의 변경등)</p> <p>① 은행은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은행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예정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</p> <p>②~⑤ (생 략)</p> <p>⑥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관계법령이나 관</p>	<p><삭 제></p> <p>제39조(약관의 변경 등)</p> <p><u>①은행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거래처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다만,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재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.</u></p> <p>②~⑥ (동 일)</p> <p>⑥ 삭 제</p>	<p>조 삭제</p> <p>조항변경 및 문구수정</p>
		항 삭제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련 감독규정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제41조(면책)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(또는 서명)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, 비밀번호의 누설이나 그밖의 어떠한 사고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은행은 제33조의 신고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</p> <p><신 설></p>	<p>제40조(면책) ① 은행은 지급청구서 등에 표기된 인영(또는 서명)을 신고한 인감(또는 서명)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지급청구서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비밀번호와 일치함을 인정하여 지급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래인감(또는 서명)과 지급청구서 등의 도용·위조·변조, 비밀번호의 누설 등으로 말미암아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② (좌 동)</p> <p><u>③거래처가 거래처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33조의 신고를 지연하여 발생한 거래처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④제1항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</p>	<p>문구추가</p> <p>문구수정</p> <p>문구신설</p>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</p> <p>제42조 (관할법원) 은행, 거래처가 이 신탁계 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</p>	<p>시 접근매체(카드, 비밀번호등)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,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. 다만, 거래처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p>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거래처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</p> <p>제42조 (관할법원) 은행, 거래처가 이 신탁계 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</p>	문구수정

현 행	개정안	비 고
<p>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다만, 거래처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거래처의 주소지 또는 거래처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	<p>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 다만, 거래처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<u>거래처의 선택에 따라</u> 거래처의 주소지 또는 거래처가 거래하는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</p>	